[UCI]I804:24011-200000263795

2013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 초 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 Focus on Kim Dae-jung Government —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 초 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수열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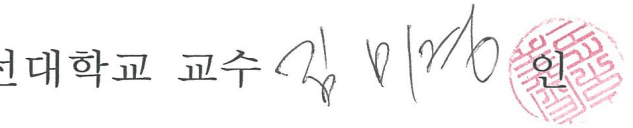
2012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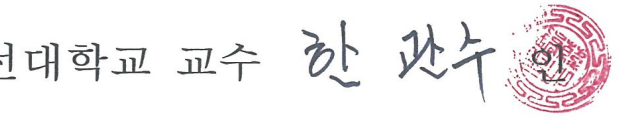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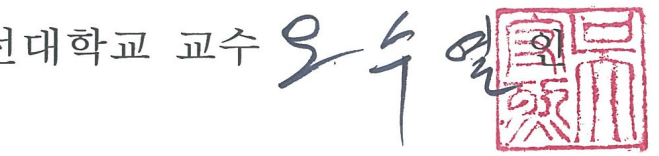
정치외교학과

이　초　군

이초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 한반도정책 기조 ·····5
제1절 중국대외정책의 목표 ·····5
제2절 중국대외정책의 기본원칙 ·····7
1. 반(反) 패권주의 ·····7
2. 평화공존 5원칙 ·····9
3. 실용주의 원칙 ·····10
제3절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 ·····12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12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13
3. 한반도의 비핵화 ·····14

제3장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결정 변수들 ·····17
제1절 국내적 요인 ·····17
1. 역사관의 문제 ·····17
2. 경제발전 ·····19
제2절 국제적 요인 ·····21

1. 중 · 미 관계 ·····21
2. 중 · 일 관계 ·····24

제4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국 정책 ·····27
제1절 한반도의 정세 변화 ·····27
제2절 정치관계의 발전 ·····31
제3절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 ·····36
제4절 경제 · 무역 관계의 발전 ·····38

제5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 ·····42
제1절 정치관계의 발전 ·····42
제2절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 ·····46
제3절 경제 · 무역 관계의 발전 ·····49

제6장 결론 ·····54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1>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
<표 2> 제1차 남북 당국 정상회담 ·····29
<표 3> 사회 문화 분야 남북 왕래 ·····31
<표 4> 한·중 정상회담 일지 ·····37
<표 5> 1998~2004년 한·중 교역발전 ·····39
<표 6> 한국과 중국의 5대 교역국 ·····40
<표 7> 중국·북한 당국 상호 방문(1996.6~2003.10) ·····44
<표 8>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1998~2001년) ·····51
<표 9> 중·북한 교역통계 (1991~2004년) ·····52

ABSTRACT

A Study on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 Focus on Kim Dae-jung Government —

Li, Xiaojun

Advisor: Prof. Oh, Soo- Yol, Ph.D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s economic construction has been selected and pushed forward as the top priority of the national policy since Deng Xiaoping announced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In order to realize this it requires a stable surrounding environment. China's surrounding area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must maintain stable and peaceful state that China can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creation of favorable, stable and peaceful surround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an essential foreign policy task for China.

Korean Peninsula has been China's strategic communication center of maintaining China's safety. And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has been divided tow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ing greatly influenced from the surrounding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nce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was established in 1992, especially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the political field, leaders of both sides have many exchanges of visits and meetings in multilateral activities on the international arena, which have promoted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nd enhanced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On the economic fron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constantly deepened and the two sides have become important trading partners. On the other

hand in the Northeast Asia, US, Japan and South Korea have not established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until now. At the same time there are various constitutive contradictions, historical piled-up grievances and territory conflicts among those nations in Northeast Asia, all which fall Northeast Asia into unsafe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deal with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which is beneficial to develop friendly relation between China and her neighbor in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region environment.

This thesis analyzed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 Kim Dae-jung when facing the American attempt to dominate the peninsula and the Northeastern Asian region, China kept continuing to consolidate and improve Sino-ROK friendship, to actively push the North and the South to solve the peninsula issue independently, and in this way to ensure its floor and influence on the peninsula issu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와해되면서 미국 일국의 질서가 구조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중국이 경제적 상승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 덩샤오핑 및 장쩌민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중국지도부의 핵심적인 국가목표는 국가현대화 실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와 존중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정치안정과 평화로운 국제환경의 확보가 급우선임무가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 관련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어떠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유지와 번영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건설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크게 3가지 기조 아래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지지하며 통일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하고 무력을 통해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 세 번째, 남북한과 국제사회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지지.

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반세기에 걸친 첨예한 적대적 대립을 풀고, 화해와 공존 및 협력의 단계로 들어서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확산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즉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화해와 협력추세는 평화공존과 실용주의 위주로 추진한 중국의 외교정책 원칙에 부합하고 중국한테 이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

기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실리,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 그리고 평화통일의 추구라는 점에서 높은 전략적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 수교에 인한 7년 동안 끊어졌던 북한과 중국 정상의 상호 방문도 1999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본 연구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역사적·지정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 특히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제일 활발하게 전개된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 완화 문제 있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의 역사와 전통,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전개되어왔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은 전의 외교정책에 실행했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보다는 국익과 경제건설을 우선하는 실사구시의 개혁·개방정책이 그 이후의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제3대 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상으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시기(1998.02 ~ 2003.02)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국 및 대북한 외교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로즈노(James Rosenau)는 『연계 정치학: 국내와 국제체제의 수렴에 관한 호론』에서 한나라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 투입요인으로서 '국내 결정요인'과 '국제 제약요인'의 영향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연계 분석법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피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관계 완화 문제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한반도의 정세, 특히 남북화해 및 협력에 제일 활발한 때인 김대중 정부시기에 중국은 과연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정책을 펴왔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역

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중국 국내정치 및 경제와 남북한 관계의 변화도 분석한다.

앞에서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문헌 중심의 연구방식을 취하며, 탈냉전 시기 중국의 외교 정책변화에 따라 한·중 수교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서술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 중국의 국내적 요인들 및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동북아 안정 및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미관계와 중·일 관계를 국제적 요인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구성은 총6장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 한반도정책 기조, 제3장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 변수들, 제4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국정책, 제5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제2장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1세기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기본원칙인 반패권주의, 평화공존5원칙, 실용주의 원칙 그리고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탈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변수들을 국내적인 변수인 역사관의 문제와 경제발전, 국제적인 변수인 중·미관계, 중·일 관계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햇볕정책'의 추진한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남북 간의 화해 및 협력 정세 나타났고 199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심화로 정치경제적 의존이 증가하면서 냉전기의 "동맹"외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양국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게 되었고 정치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워진 실용주의적인 원칙에 인해서 정치적으로 '혈맹'이나 '형제와 같은 관계'(兄弟之邦) 등의 특수한 호칭으로 관계 맺었던 북한과의 관계는 1999년에 끊어졌던 정상의 상호 방문을 재개시켰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냉정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북·중 관계는 무상원조에서 실용주의와 동맹관계가 뒤섞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재조정되어 나간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연구 결과로 요약한다.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기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중국에게 있어 한·중 관계 및 중·북 관계의 가치와 의미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자체의 대외정책과 국제질서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기본원칙 그리고 대 한반도 정책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절 중국대외정책의 목표

외교정책은 정식으로 지명된 국가사회의 관리들이 전임자 또는 그들 자신이 결정한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제체계 상황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행위 과정이라고 한다.[1]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대외정책은 그 국가가 겪어온 여러 가지 배경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중국의 대외정책도 주어진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중국의 안보, 경제등과 같은 국가이익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주어진 것이다.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중국공산당 집권 60년은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까지 대외정책의 기본은 일치한다. 즉, 중국외교는 중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독립자주 외교를 전개하고, 영구평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다만, 각 지도자가 당면한 국내외 환경의 차이로 인해 대외업무 처리와 지도자의 독자적인 품격을 달리 형성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와 안보를 우선시되기 하였고, 사회주의 혁명의 건설과 국제주의, 애국주의가 강조되었던 시기로서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외교정책이 결정되던 시기였다. 1970년대 이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4대 현대화 (농업, 공업, 과학기

1) James N. Rosenau, "Comparing Foreign Policy: Why, What, How" in James N. Rosenau, ed., Comparing Foreign Policies: Theories, Findings and Method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p.6.

술, 국방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과거 19세기 이래로 상실했던 지역맹주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국방현대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에도 중국의 최고 정책 노선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공식적으로 1978년 12월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이어서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 이후의 자주노선의 모색, 1989년 6월에 발생한 중국의 외교노선에 커다란 변화를 초해한 중요한 사건인 천안문 사태와 동구권의 몰락이후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통한 자주독립노선의 강화로 대별할 수 있다.[2] 인권문제를 둘러싼 서방세계의 압력은 중국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었다.

장쩌민의 제3세대 지도부는 21세기 중국의 대외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해 강대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 주변국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3] 추진해 왔다.[4] 즉,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관계의 안정적 발전,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다자외교의 적극적 참여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종합국력을 증강시키는 데 핵심 국가정책 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하며,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유지와 선진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2002년 중국공산당 16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溫家寶)는 향후 20년을 위대한 중화민족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보고 경제발전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5]를 건설한다는 국가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또한 21세기 들어서면서 대만문제와 소수민족문제 및 동북공정 등 문제의 해결를 국가통합 실현과 국가주권의 수호도 중국이 추구하게 된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로 되고

---

2)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1999, pp.376-378.

3)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건설적 전략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등으로 쌍무 혹은 다자간의 '동반자관계'이다. 韓震涉, "發展中韓夥伴關係迎接21世紀的挑戰", 『中國外交』, 2000年 第5期, p.40.

4) 閻學通, "中國外交需立足周邊", 『瞭望』, 2000年 第11期, p.50.

5) 소강사회(小康社會): 국민의 생활수준의 개념을 넘어 경제 사회 발전을 실현하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며 민족 부흥을 향한 사회 발전 단계라고 밝혔다.

있다. 1997년과 1999년 각각 홍콩과 마카오주권 회복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력해 왔으나,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가 '양(兩)국론'을 주장하고 2000년 대만독립을 당 강령으로 내건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대만의 총통에 당선된 뒤 대만독립문제가 양안관계를 더욱 긴장시켰다.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이며 지역 간 불균형적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해 온 관계로 중국에서는 서부 내륙지역 간 빈부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왔다. 지역 간·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는 중국사회에 대한 불만세력을 양산하여 1989년 천안문사건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1999년부터 중국이 서부지역 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지역 간 불균형적인 발전에 따른 중국사회의 불안정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중국은 21세기 초 경제건설을 통한 종합국력 증강이라는 국가전략 목표를 중국으로 안정적 주변 환경을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선린외교와 강대국과의 협력외교를 추구하였다.

제2절 중국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은 반패권주의, 평화공존, 실용주의, 하나의 중국 및 경제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여 세계정세의 다극화, 경제의 세계화 등 전반적인 국제 정세가 완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이 세계의 조류가 되고 있다고 보는 한편,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지역이 강대국 간의 마찰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1. 반(反) 패권주의

반패권주의(anti-hegemonism)원칙은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에 패권주의적 영향력을

6) 黃正一, "韓·中 修交以來 中國의 對北韓 外交政策", 200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7]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한 후 제1세대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국제관계 판단의 틀 속에는 근대 중국역사의 중국 혁명 과정에서 겪은 많은 제국주의 국가의 중국 주권 침해 경험이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국의 반 패권 논리의 뿌리가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 관계에는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소련의 점차 증가되는 군사적 압력을 극복하려는 데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국제정세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었고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패권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5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중·소 분열 특히 1969년 3월 중·소 국경지대에서의 무력충돌 사태를 야기 시키게 되면서 중국의 대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새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8]

중국에서 반(反) 패권이 내정과 외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롯되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71년 12월 17일 수단 대표단 환영연회에서 "사회제국주의는 세계패권을 위하여 항상 파렴치하게 침략, 팽창 및 경쟁을 해왔다. 중동에서는 평화유지 라는 간판을 내붙이고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는 아랍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 하고 미국·이스라엘 침략자에 맞선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아랍민족들의 무장투쟁을 해치려 한다. 사회제국주의가 평화유지 또는 민족해방지원을 떠든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거짓말들이며, 진실은 세계패권을 위한 침략, 팽창 및 경쟁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다"고 재차 비판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중심이 안보중심에서 경제실리위주로 바뀌면서 미국과 소련에 대한 반패권주의 원칙도 유연해졌다.[9]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독립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냉엄한 국제 권력정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권력균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반패권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하는 국가는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중국의 반 패권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주요 내용이자 목표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9월에 개최된 제15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제시 된 『정치보고』에서는 현재의 국제환경

7)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2000, p.38.

8) 千 勇, "中國의 實用的 反霸權主義 外交政策과 韓·中修交", 2009, p.35.

9) 오용석, 앞의 논문, p.41.

이 다극화 되어가고 있으며, '패권주의' 와 '강권정치'가 국제질서를 해치는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제1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는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을 종사하지 않다” 고 보고를 하였다.[10] 즉, 중국정부는 항상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부흥 과정에서 패권과 외부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기존의 국제 체제와 질서에 도전하지 않다고 의미한다.

2.평화공존 5원칙

평화공존 5원칙(平和共存 5原則)은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간의 「티베트에 관한 중 · 인 협정(中印協定)」 전문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 · 간섭 봉쇄 및 다수 국들과의 광범한 통일전선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영토보존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11] 중국은 건국 전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소련을 향하는 일변도(一邊倒)정책을 견지해왔으며 건국 후 소련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시대를 격어 왔으며 중국이 제국주의와 봉건,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하에 탄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는 비교적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에게 기울고 소련에 품에 완전히 뛰어 들진 않았다. 특히 1950년대 중 후반부터 소련이 중국에게 과도한 간섭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더욱더 자주적인 외교를 원했다. 1969년까지 중소 관계가 악화 되면서 평화공존 5원칙은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설립하는데 전개되었다. 개혁 · 개방 이후 평화공존 5원칙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의 고속 발전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전방위(全方位) 외교에 운용되었다.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해 평화공존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평화공존 5원칙을 국가이익 차원에 따라 외교활동에 탄

10)“胡錦濤在黨的十七大上所作的報告”,『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4/content_6938568.html 2012年11月15日.

11) “평화공존5원칙”은 1954년 4월 체결된 중 · 인도 간 및 네팔 · 인도간의 통상 · 외교협정전문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954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네루인도수상 및 미얀마수상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1955년 4월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참가 29개국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 및 협력에 관한 10개 항목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력적으로 적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한다. 특히 중국은 이 원칙을 강조 하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내정 간섭을 억제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칙은 중국이 내세운 화평굴기(和平崛起)정책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12)]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주변국가 들과의 선린우호(睦鄰友好) 관계 구축, 전 세계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노력 등 구체적인 외교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역사가 남겨놓은 국경 · 영토 · 영해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하였다. 중국은 기존에 강조점을 두었던 동반자 관계 구축은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적 · 국제적 협력체 등을 통한 다자적 틀에서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수립과 유지에도 큰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공존 5원칙' 을 제시하면서 남북한이 맺은 7 · 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의 3대원칙을 지지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에 의한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실용주의 원칙

실용주의는 경험주의의 연속이다. 경험주의자들은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용주의는 원리 범위 필연성보다도 결과, 성과, 사실 등에 치중한다. 따라서 원리도 선험의 보편타당성을 띤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론의 실천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어야 한다.[13)] 덩샤오핑 이전 중국의 의식형태를 주도해 온 것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었다. 마오쩌둥시대 하의 중국은 기본명제로서 "계급투쟁을 고리로, 무산계급 독재하의 계속 혁명을 진행한다."를 기본으로 모순론, 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의 개념으로 삼았다.[14)]

그러나 문화대혁명 끝난 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까지 덩샤오핑 위주의 개혁

12) "중국, 평화공존의 5원칙", http://pkukorea.tistory.com/125

13) 김호길, "중공 실용주의노선과 이데올로기", 『사회과학논총』 제1집, 부산외대사회과학연구소, 1985, p.72.

14) 方秀玉, "中國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인간사랑, 2004, p.148.

파와 공산당 내의 보수파의 논쟁을 통하여 덩샤오핑 실용중의 정책을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은 "건설을 하기 위해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중국식의 현대화 노선을 가야한다" 라고 말해 세계 각국이 각기 다른 실정과 상황에 처해 있듯이 발전도 각국의 방식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설정에 맞는 발전방향이 중국식사회주의라고 제시하고 있었다.[15] 1978년 말 중국은 덩샤오핑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대외경제 정책을 급전환하여 개방형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개방형 개발전략이란 대외무역의 확대, 외자·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대외경제관계를 확충함으로써 중국경제의 현대화를 가일층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 까지 개최 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실사구시, 실천은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實事求是, 實踐是檢驗眞理的唯一標準)"이라는 구호도 제기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덩샤오핑은 당 간부들에게 한 연설에서 1980년대 중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반 패권주의에 의한 세계평화의 유지; 둘째, 대만을 포함한 구구가통일의 달성; 셋째, 4개 현대화 및 경제건설의 실현. 이 중에서 핵심은 경제건설 즉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16] 그리고 1986년 3월에 개최된 제6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기존의 개혁 방침을 고수하고 아울러 새로운 사회주의 거시경제 관리체제의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장쩌민시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 시대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세는 전반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를 지향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면서 "독립자주의 외교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해야한다고 선언하였다.[17] 장쩌민시대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제사화의 요구와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

15)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 p.130.

16) 『鄧小平文選』"目前的形勢和任務", 北京：人民出版社, 1983, pp.203-205.

17)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在中國共產黨第一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年9月21日.

제3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기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종합국력 증강을 한반도의 안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부터 개혁·개방 이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취진해 온 결과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무력통일과 같은 대립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약 남북한 사이의 긴장국면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장쩌민 시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환경을 계속해서 중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중국과 한반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정치·외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경제와 안보상에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보호해야 한다는 전략 기조를 견지해왔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정세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만약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도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장쩌민 주석은 2000년 5월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중국은 일방적 세계질서에 반대하고 국제구조의 다극화를 주장해왔고 다극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태 지역

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의 경제·기술의 우세와 북한의 인력자원과 시장의 유세가 결합하게 되어 그 경제는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 후의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각 대국들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 작용을 하게 되어 이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무엇보다도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다른 관련국들의 일에 대해 개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평화공존 5원칙을 지키면서 남북한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1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펑(李鵬)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반도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발전 그리고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통일목표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외래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18] 이러한 정책은 주변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억제시킬 수 있고 동시에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련하여 "한민족 스스로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지지하면서 통일방식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남·북한 간에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남·북한 간에 진행되어온 차관급 회담 및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모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것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지원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남북한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상흔을 잊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기초 작업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2000년6월15일 『人民日報』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하면서 평화와 발전

18) 『연합뉴스』, 2001년 8월 24일.

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서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악수는 한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조건을 창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인 전략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한국이 불확실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통일 한국이 친미 성향의 정부가 탄생될 때는 중국으로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적인 불안 및 한반도에서의 미국 패권을 확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하의 한반도 통일, 미국군의 북한지역 진입은 전략적 방벽 상실, 미국에 의한 중국의 길 위명으로 인식하여 저지하고 있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핵개발 및 보유에 반대하며 3비3불원(3非3不願) 정책을 기본으로 하였다. 즉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비전쟁, 북한 정권의 비붕괴이고, 3불원은 한반도가 미국과 밀착되는 것, 한반도 중국과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것, 남북한이 민족주의로 뭉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19] 때문에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을 추방함으로써 IAEA와 체결한 안정협정을 파기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날 기대할 수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및 안보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나섰다. 19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자 3월25일까지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19) 이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특징”, 2011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개발을 북한처럼 체제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주변지역에 군비를 경쟁시켜 역내 안정을 저해 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판단아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지만[20] 중국은 북한의 존립과 좌우되는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여 북한에 대해서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북한을 간접적으로 설득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이 2002년 10월 핵개발 시사표명 이전에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론은 근거가 없는 추론이라는 입장 있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하였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의혹 해소는 관련 당사국간의 외교적 대화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표명 시사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면서 중국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21]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2002년 12월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공동선언문은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확대 금지 체제의 유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남북한 양측 당사자들에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장쩌민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김대중 정부의'햇볕정책'의 기본구조와 상당부분 부합되는 모습이 보인다.[22]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완전한 참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6개월만인 2002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아래 북한·미국 양측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3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3자 회담을 성사시킨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측의 외교적인 노력이 주효했음이

---

20) 金衡坤, “金正日 政權 登場以後 北韓-中國關係研究”, 2003年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36.

21) 앞의 논문, p.37.

22) 장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장쩌민·후진타오를 중심으로”, 2010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1.

보였다. 2003년 3월 3자 회담을 위해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전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때 김정일과 회담을 가지고 다자간 협의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기술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자신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고 동북아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반사적으로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견고하며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조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장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결정 변수들

모든 국가의 대외정책은 대내외 환경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어있으며 또한 정책목표를 추진하게 될 정책결정자가 누구인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떤가, 대내 국민여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중국이 개혁·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환경 요인 등 모두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 제시된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은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절 국내적요인

1. 역사관의 문제

중국 동북지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주목을 받으면서 동북아 중심위치로 됨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측면의 문제 및 동북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변화를 대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은 동북공정이란 연구프로젝트이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연구프로젝트는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중국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란 뜻이다. 동북공정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는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국과 조선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변강 안정에 대한 연구>등 포함된다. 특히 동북지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관계사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은 동북공정이 대부분 한반도의 역사와 한·중 관계사에 관한 것이었고, 남북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관한 정세를 연구[23]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23) 윤휘탁, "중국의 변강 연구동향과 변강인식: 동북변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 연구재단, 2004.

그러나 이러한 연구 과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인식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며, 중국의 동북 변경지방의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6년 중국정부는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동북공정의 핵심 연구과제로 지정하였고, 이에 1997년까지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고구려연구센터'과 '조선·한국연구소' 포함된 10여 개의 고구려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수차례에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200여 편의 저서와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002년 2월 28일 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공정을 한가지만의 이유로 시작 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감과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이완현상의 심화 민족·지역 간의 갈등 표면화 등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고민거리로 등장하였고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주창되었다. 더구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들이 동북지역을 찾아와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를 답사하게 되고, 한국 역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선족들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 되었으며[24] 남·북한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간도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역사적인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 따라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중국은 동북지역 내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주변 환경의 구축을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왔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중국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지역질서에 영향을 끼치려는 제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25] 중국은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동북공정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대비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동북아시아 중심국으로써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었다.[26] 이와 같이 동북공정의 추진은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24) 이홍환,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연구", 2004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

25) 김수현,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 2007년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에 결정에 있어 국내적 변수로 볼 수 있었다.

2. 경제발전

중국은 탈냉전시기 국가관계에서는 군사력 경쟁 보다는 경제와 과학·기술력 경쟁이 중요시 되고 있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력 발전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 대내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대내 정치안정을 확보하는 첩경이라고 인식한다. 1978년 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압축적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 정치외교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개방 이후(1990~2005년)에는 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다.

< 표 1 >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연도	연평균 성장률
1990	3.8
1991	9.3
1992	14.2
1993	14
1994	13.1
1995	10.9
1996	10
1997	9.3
1998	7.8
1999	7.6
2000	8.4
2001	8.3
2002	9.1
2003	10
2004	10.1
2005	9.9

자료: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Condi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5, 2009), pp.3-4.

26) 앞의 논문, pp.17-18.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의 폭발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권과 민주사회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력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게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 확인된 실용주의 원칙과 같이 중국의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여 종합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가 목표이므로 이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것은 곧 갈등과 분쟁보다는 평화와 발전을, 대결과 대립보다 타협과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에 대해서는 독립자주 외교와 반패권주의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나라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추구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한다.[27)]

그리고 중국은 15년간의 오랜 협상 끝에 2001년 12월 11일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경제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대외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이 평화롭고 안전적인 주변 환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결국 덩샤오핑 체제 이어서 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수행한 장쩌민 시기는 경제적 요인으로 중국이 세계정치 환경에서도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대외정책 결정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즉 경제외교의 강화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정하게 되었다. 국력의 신장과 함께 중국은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대외정책의 초점을 두던 데서 점차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주변국과의 선린우호외교도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장쩌민의 인식아래 나타난 외교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15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발전이 국내적 요인의 중요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7)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 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폴리테이아, 2008, p.288.

제2절 국제적 요인

1. 중 · 미 관계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탈냉전시대를 기본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였다.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의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미 두 나라는 때로는 협력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때로는 갈등요인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중·미 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28]

역사적으로 중·미관계는 적대관계(1949-1968), 전략적 제휴관계(1969-1980), 경제적 제휴관계(1980년대 중반-1989), 갈등관계(1990-1992), 경쟁과 협력, 갈등의 이중적인 관계(1993-1999)로 발전해왔다.[29]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972년 양국 관계 화해까지 미국과 중국은 냉전적 대결 구도를 형성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양국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토주권의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등을 기초로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1979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 협력관계는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권의 등장과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노선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이데올로기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랬다. 따라서 한·중 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도 촉발시키기 시작하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다방면으로 증가·확산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한·중 수교에는 소극적이었다.[30] 1990년대에 들어 중국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하였지만, 정치·안보 면에서는 경쟁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어서 1991년 소련의 붕괴된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세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중·미 관계는 협력적 측면보다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그럼

28)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28-30.

29)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1999, p.3.

30) 서진영, 앞의 책, p.403.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함 위협의식이 확산되고, 중국 국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 자주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 중국의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 신속하게 제고되었고 이처럼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를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팽창주의 적 야심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팽창 야욕이 단지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이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1] 이에 따라 장쩌민 시대의 중·미 관계는 덩샤오핑 시대보다 기복이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클린턴(Bill Clinton) 정부시기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인권문제와 중국과의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한다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전략 구상에 동의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환화와 평화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32] 그러나 미국의 부시(George Walker Bush)행정부는 '대만문제', '인권문제'등 민감한 문제들을 들추어내면서 더 노골적 형태로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잠복해 있는 가장 폭발적인 문제인 대만문제는 1995년에 대만의 리덩후이(李登輝)의 방미 사건으로 다시금 긴장관계로 전환되었다. 급기야 1996년 3월 중국의 미사일 발사사건으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촉발되고, 그 뒤 미·일 양국이 1996년 8월 17일 미·일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양국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33] 1997년 장쩌민의 미국 방문으로 중·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장쩌민은 미국과 협력해야만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방미 기간에 "중·미 관계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31) 琴喜淵,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외교정책", 『중소연구』, 제27권 제4호, 2005, p.89.
32) 서진영, 앞의 책, pp.404-406.
33) 이태환, "9·11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신아세아』, 제11권 제2호, 2004, p.114.

하자"라는 공동성명의 발표하였다. 1998년 클린턴의 방중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3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만문제에서 미국이 삼불(三不: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 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정책을 선언하여 중·미의 협력은 고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중·미 관계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2000년 대선과정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2001년 4월 1일 미 정찰기 충돌사건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중·미 관계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중·미관계도 새로운 기회를 자지게 되었다. 즉, 반테러 전쟁을 당면 목표라고 선언하면서 탈냉전시대의 주요 쟁점은 인권과 민주화보다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가 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갈등과 경계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변화되고 있다.[34]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에서 중·미 양국은 상대국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인식과 신뢰수준에 따라 협력 혹은 갈등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1996년에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조언하였고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경책에 반대한다는 점도 했다. 1997년 10월 29일 중·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조정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체로 협력하였고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핵 비확산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 있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35] 미국은 중국이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경쟁 대상국이기 때문에 견제와 봉쇄의 대상이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획득할 수 있는 실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견제 추구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여기고 있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런 복합적 관계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중·미 관계가 협력적일 때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입,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34) 서진영, 앞의 책, p.183.

35) 「人民日報」, 1991年11月16日,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pp.1140-1141.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고,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또 한편은 중·미 관계가 갈등적 관계에 있을 때 북·미 관계도 갈등이 고조되고 남·북한 간의 화해진도를 방해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미 관계는 중국 대 한반도 정책결정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중·미 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 현안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지지하기보다는 남북한 당사자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 일 관계

중·일 관계를 냉전시대의 '비정상적 관계'(1949~1971)와 데탕트시대의 '국교 정상화와 평화우호조약의 시기'(1972~1989)로, 탈냉전시대를 '천안문 사건 이후 평화와 발전의 동반자관계 모색 시기'(1989~1998)와 '탈냉전의 협력, 경쟁, 갈등의 불안정한 시기'(1999~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37] 냉전시대에 양국이 직접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고 일본은 사회주의권에 속했던 중국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1960년대의 베트남전쟁이나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 심각한 위협의식을 갖지는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후반기 중·소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소련의 심각한 안보위협을 돌파하기 위하여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을 때 마침내 1972년 2월 닉슨(Nixon)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미관계 개선을 선언한 상하이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양국의 극적인 대변화 현실화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기 호감을 갖기까지 했다. 곧이어 7월에 중·일 관계 정상화에 강력한 의욕을 표방한 다나카(田中角榮)내각이 등장하여 속전속결로 중·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2년 9월 25일 다나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 회담하였고, 9월 29일에 중·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78년 8월 12일에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

36) 서진영, 앞의 책, p.409.

37) 서진영, 위의 책, p.227.

중·일 관계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더욱 밀접하게 발전하는 것 같았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1992년의 무역총액이 290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수출액의 13.8%, 총 수입액의 17%로 일본은 홍콩-마카오에 이어 제2위의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 보면 중국은 수입에서는 총액의 7.3%로 제2위, 수출 상대로서는 총액의 3.5%로 제8위였다.[38]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1990년대 중·일 양국은 고위층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예민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문제와 대만문제 등 문제들 억제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8년 11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할 때 양국 지도자들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의 동반자관계 구축에 관한 공동선언"(中日發表關於建立致力於和平與發展的友好合作伙伴關係的聯合宣言)을 채택하고, 양국은 21세기를 향해,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처럼 중·일 관계는 한편으로 탈냉전시대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매년 15%에 가까운 국방비 증대율을 보이면서 중국위협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의 재조정이 초래됨으로써 중·일간 상호 견제와 경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중국위협론은 일본 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반 시민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중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은 37.3%인 데 비해,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은 55.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가 및 관료, 자유주의적 계열의 지식인은 중국위협론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39]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탈냉전기의 구조 속에서 경제, 외교, 안보의 제반 영역에서 국가 주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각국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민족주의가 고조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일본과

38) 조정남, "아시아의 패권질서와 중·일관계", 서진영 편, 『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p.141 참조.

39) 박영준, 『제3의 일본: 21세기 일본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한울아카데미, 2008, p.300.

중국이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40]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 증강,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기도 등을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를 한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적 외교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일본과 경제적 협조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및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 국제질서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결국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의 일본과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촉진요인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문제 이를테면,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신사 침해 문제, 그리고 댜오위다오/센카쿠를 포함한 영토분쟁 등 문제에 대한 양국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경색된 배경에는 양국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도 중국의 국가 목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처럼 21세기 중·일 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전개 되었지만 세계화는 냉전시대와 달리 각국이 평화공존을 선호하면서 각자에 대해 '합리, 실리적이며, 절제 있는 방침(有理, 有利, 有節方針)'을 견지하기 때문에 냉전시대와 같은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41]

40) 박영준, 앞의 책, p.291.

41) 陳向陽, "冷靜與全面審視中日關係 切忌因小失大", 『人民日報』, 2005年4月22日, 참조.

제4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국 정책

국제정치의 중심이 군사-안보적 사안으로부터 경제-무역 적으로 옮긴 것을 탈냉전 시기 하나의 특징이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전체 전략과 평화발전에도 필요한 조건인 것이었다. 이런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가중시키는 행동에는 반대한 입장이었고 따라서 과거 혈맹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던 북한과의 관계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조정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선린우호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어 중국은 사실상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1절 한반도의 정세 변화

한반도 정세에 있어 남북한 관계는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의 개최함으로써 괄목한 성과를 거듭했고 한반도의 대화 및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에서 이익을 부합하며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기 남북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과거 정권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할 정도로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햇볕정책은 온건한 대북정책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 합리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돕게 된다.[42]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은 당시 이슈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부문과 사회문화부문에서의 협력을 진전시켜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다"고 대북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43]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 상징하는 주요 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관계에는 정치적 분야 외에 경제적인 교류가 선행되었고 6 · 15 정치적 선언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 있어 성과를 거두었다.[44]

2. 제1차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추진한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북한은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한관계에 전환의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남북한 분단 55년만의 당국자 간 최초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라 할 수 있는 6 · 15남북공동선언 발표,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장관급회담의 정례화를 괄목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분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사이의 협력 그리고 통일의 전체방향을 선언하였고, 이어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선행 사안으로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상호 군사훈련 참관 등을 논의했다. < 표 2 >에

42) 김경호, 『국제정치 환경과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2001, pp.110-114.

43) 황지환,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햇볕 대 제재의 이분법을 넘어서", 『공공정책연구』, 2010, 통권 제17권 2호, p.41.

44) 이성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 第12輯, 2004, p.112.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네 차례의 장관급회담, 최초의 국방장관회담, 경협실무접촉,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감용순 특사의 제주도 방문 등 6개월 내내 접촉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왔다.

< 표 2 > 제1차 남북 당국 정상회담

명칭	일시 및 장소	회담 대표	주요 내용
정상회담	6.13-15, 평양	김대중 대통령 VS 김정일 국방위원장	-「6·15 공동선언」 -5개항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정상회담 관련 준비접촉	평양, 판문점 등	차관급	-특사 접촉(3회) -정상회담 준비접촉(5회)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제1차 장관급회담	7.29-31, 서울	박재규 통일부 장관 VS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제2차 장관급회담	8.29-9.1, 평양	상동	7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제3차 장관급회담	9.27-30, 제주	상동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제4차 장관급회담	12.12-16, 평양	상동	8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제1차 국방장관회담	9.25-25, 제주도	조성태 국방장관 VS 김인철 인민무력부장	공도보도문 발표
남북군사 실무회담	1차: 11.28 2차: 12.5 3차: 12.21	김경덕 준장 VS 유영철 대좌	-남북관리 구역의 범위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군사적 보장 문제 협의

			-북측이『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을 비난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3차)
제1차 경협 실무접촉	9.25-26, 서울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 VS 정운업 무역성 지도국장	공동보도문 발표
제2차 경협 실무접촉	11.8-11, 평양	상동	4개 합의서 작성
제1차 적십자회담	6.27-30, 금강산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VS 최승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이산가족방문단교환(8.15)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운영 -북측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 송환(2000년9월 초)
제2차 적십자회담	9.20-23, 금강산	상동	-이산가족방문단교환(8.15)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시범적으로 100명 실시, 확대) -면회소 설치는 제3차 회담에서 협의

자료: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p.131.

이뿐만 아리고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사업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크게 증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접촉이 진행되어 남북 주민간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민간 사회문화 교류는 당국 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남북 관계 발전에 큰 추동력이 되었다.

< 표 3 > 사회 문화 분야 남북 왕래 (단위: 명)

년도	1989~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방북	701	239	330	1,150	2,916	2,501	3,395	3,557	10,777	25,566
방남	534	0	62	404	32	937	941	280	675	3,865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이처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의해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Win-Win의 통일모형을 구상하게 되었다.[45] 중국은 국내 경제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조성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러한 화해와 협력을 지지한 입장이었다. 이 또한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영향요인으로 작용된다.

제2절 정치관계의 발전

199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심화로 정치경제적 의존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였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일국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동반자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주변국가들 사이에 중국

45) 김경호, 앞의 책, p.107.

에 대한 위협의식이 느끼게 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가와 동반자관계를 맺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불안과 견제심리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안보환경과 국내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을 하였다.[46] 쌍무적인 측면에서의 동반자관계로, 중국과 중국의 주변정세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들 혹은 중국과 공동의 이익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형성한 쌍무적 동반자관계로, 중국과 한국, 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과 형성한 동반자관계이다.

동반자과계 앞에 다른 수식어,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조(戰略協作)', 근본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있으나 앞으로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건설적 전략(建設性戰略)', '전면적 협력(全面合作)' 등 다른 수식어로 명칭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관계의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동반자관계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47]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중국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고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외교를 가장 중시하였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강대국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정치·경제적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가 가장 중요한 외교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선 중국은 먼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는 개혁·개방 이후 변하지 않은 중국의 외교기조이며, 이러한 외교기조 하에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와 안정된 주변국 환경이 목표로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시기 중국 측에서 한반도에 대한 가치 인식을 Samual S. Kim은 다음 과 같이 분석한다. 먼저 중국이 전략의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안보의 핵심적 전략지역으로 동북아의 안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중 하나인 한국은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중국 현대화에 모델이 되는 국가였고, 중국은 한국의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46) 寧騷, "選擇夥伴戰略 營造夥伴關係-跨入21世紀的中國外交", 『新視野』 2000年 第二期, pp.6-7.

47) 王巧榮, "論20世紀90年代中國的夥伴關係外交", 『思想理論教育導刊』 2006年 第二期 pp.54-56. 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Vol 17-2 October 2009, pp.107-108. 참조.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일본의 경제적 패권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반도가 분단 상태이건 통일이 되던 간에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 도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반도는 중국에게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가는 정책의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48]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진 후 장쩌민시기 들어서면서 이런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이 1993년 2월초 한 외교부 회의에서 한중수교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본입장, 8개항의 대한반도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49]

1997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중국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 있다고 밝혔다. 첫째, 평화와 발전이 오늘날 시대적 주제가 되었으며, 둘째, 세계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다극화로 되었으며, 셋째,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가들과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21세기의 부강한 국가로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 와중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수교를 한 당시 발표한 고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한 것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중요한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50] 수교 초기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북한과는 정치관계를 유지한다는 "정경분리" 구상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

48) Samual S. Kim, "The Future of China and Sino-ROK Relations," The Future of China Northeast Asia, Seoul: The Institur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1998. 신동호, "중국 위협론의 실체와 한·중 관계의 전망", 2003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7.

49) 「한국일보」, 1993년 3월 5일. (1) 중국은 북한과 더 이상 새로운 정치, 군사적 합의를 갖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접촉 등 어떠한 사안도 승인하지 않는다. (2) 남·북한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한 긴장관계 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국의 핵무기 비축을 반대한다. (4) 중국은 남북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5) 중국은 북한에 선진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가 한국에 선진군사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반대한다. (6) 중국과 한국의 수교와 우호관계 발전은 아시아의 평화에 부합되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기본 정책의 하나다. (7) 중국은 현 단계에서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나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8)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장기간 계속돼온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중·북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삼간다는 내용 등 이중적 전략의 한반도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50) 정천구, "중국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통일문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pp.211-213.

제와 무역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북한과의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중 관계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관계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왔다.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할 때 장쩌민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북한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5년 11월에 장쩌민 국가주석인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갖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문화적 지리적 유사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해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양국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는 완만하였다.

1980년대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이완되기 시작하였고, 한반도 주변 4국간의 대치상황이 해소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변경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해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익도 확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의 수교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외교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대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 규모의 확대, 형태의 다양화, 협력내용의 심화를 통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교류 협력되고 있게 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한 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1998년 11월 방중으로 한·중 양국이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안보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하나의 중국' 재확인, 양국지도자와 정부 각 부문, 의회 및 정당 간 교류 확대, 경제·무역 협력의 심화 등 12개항에 합의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진입한 후부터 군 고위 인사의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 8월 슝광카이(熊光楷) 중국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중국 군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1998년 11월 한국 해군 훈련부대

가 홍콩에 기항하면서 양국간 군사교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51] 1999년 8월 한국전쟁 이후 40여년간 처음으로 중국의 국방부 장관 치이하오톈(遲浩田)의 초청으로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안보 논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한 시에는 한·중양국은 '양국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2001년 10월 한국의 해군 함정이 상하이에 입항했으며, 2002년 5월에는 중국 군함이 인천에 입항하였다. 이처럼 한·중 양국 간 협력관계는 안보 및 군사 분야에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한·중 양국 고위 군사지도부의 상호 방문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중 관계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경제적 실리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한국과의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한·중 관계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고위인사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양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직후부터 1년에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서로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중국에서는 1994년 10월 리펑 국무총리, 1995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 2000년 10월 주롱지(朱镕基)국무총리, 그리고 2003년 9월 우방궈 전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최고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에서도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 방문을 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고위인사의 활발한 교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1995년 11월에 장쩌민은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해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계속되는 과거사 망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52] 1994년 3월 한국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정식 방문하여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폭넓은 경제 협력방안과 더불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고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중 관계를 '선린우호관계'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 시키는 데 합의 하였다.[53] 또한 1992년 8월 국교 정상화와 함께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서울과 북경 간에는 거의 모든 공식 통로가 다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

51) 서진영, 앞의 책, p.386.

52) 『조선일보』, 1995년 11월 14일.

53) 서진영, 앞의 책, p.384.

다. 곧이어 1993년 상하이(上海)와 1994년 칭다오(青島)에 총영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99년 7월에는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선양(瀋陽)에 영사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이는 4년 후 2003년에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또 한국 정부는 2001년에 광쩌우(廣州)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54]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점을 존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있어서도 상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한·중 관계는 잠재적으로 한·미 동맹관계, 중·미 관계 그리고 중·북 관계 등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의 정치·외교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상대적으로 경제 및 교역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55]

제3절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

중국 제3대 지도부는 양극체제 해체 이후 다극화는 신 국제질서의 추세이며,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가 확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중 국교정상화가 실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 초기에는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 대해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 '정·경 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정한 정도의 등거리외교를 추진해 왔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기존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과는 전통적 정치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양다리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와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및 국제환경에 따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상당한 관계발전을 실현하게 되었다.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대 한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치 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양국 정상들은 많은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이외에도 양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양국

54)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240.

55) 박병광, "한중관계 15년의 평가와 과제", 『국방정책연구』, 2007년 가을 호, p.10.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표 4> 한·중 정상회담 일지

일자	장소	내용
1997.11	벤쿠버	APEC회담시 김영삼 대통령－장쩌민 주석
1998.11	베이징	김대중 대통령 방중
1999.09	오클랜드	APEC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장쩌민 주석
2000.09	뉴욕	UN 새천년 정상회의
2001.10	상하이	APEC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장쩌민 주석
2002.10	멕시코시티	APEC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장쩌민 주석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top.html)

이처럼 양국관계의 발전이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정상회담보다 양국 간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촉이 훨씬 더 활발했다. 외교 분야에서 실무 장관들이 자주 회담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협의하지만, 동시에 정상회담과 별도로 총리급 고위 인사의 회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 사법부의 대표자들도 자주 상호 교환 방문하고 있다. 특히 2002년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중 양국의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지역적인 협력은 한층 발전하였고, 지역협력의 공간도 확대되었다. 동북아지역은 지역적인 전략은 21세기에 가장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정치·경제협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따라서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93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1997년 아세안(ASEAN)+3 등의 형성과 창설을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주요3국인 한·중·일은 FTA와 경제협력협정(EPA) 등의 추진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적극 탐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한·중·일 비록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구도에 대해 방법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비정부 차원의 다방면에 걸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잠재적인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북아협력의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북한 정치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문제시된다. 한·중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므로, 세계경제 단일화와 지역집단화의 발정과 함께 다가올 위험과 사회의 불안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절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

안보 및 군사 위주의 대외전략에서 교역 및 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에서 볼 수 있었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발생을 계기로 한·중 비공식적인 접촉을 개시하였고,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론'을 주장한 덩샤오핑 이론을 21세기를 이끌고 가는 지도방침으로 격상 시켰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다시 강조했고, 2001년 7월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회에서 장쩌민은 '7·1 연설'을 통해 '3개 대표론'을 발표하여 사영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사영기업주의 공산당 입당을 허가함에 따라 과거 착취계급으로 인식되었던 사영기업주를 당 차원에서 인정하였다. 이로서 장쩌민 시기에는 경제발전이 최대의 국가과제라고 선언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왔다.[56]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주로 임가공(來料加工) 방식을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의 기술을 습득한 후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以市場換技術) 방법을 통해 중간 단계의 기술을 축적하고, 2000년대부터는 '밖으로 나가는'(走出去) 방식을 통해 외국에 산재한 저평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합병, 매수해 선진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57] 이러한 중국의 높은 학습효과(learning effects)이기 때문에 한·중 수교 이후 가장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것은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경제는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장애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56) 장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장쩌민·후진타오를 중심으로", 2010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7.

57) 정재호, 앞의 책, p.9.

한편, 한·중 양국의 경제교역은 한국이 IMF 사태로 잠시 감소했지만, 1999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 표 5 >에 내용과 같이 다시 상당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 표 5 > 1998~2004년 한·중 교역발전

(단위: 억불, %)

년도	총액	증가율	대한 수출	증가율	대한 수입	증가율	교역수지
1998	221.64	-11.6	62.7	—	149.9	—	-87.2
1999	250.36	17.7	78.08	24.9	172.28	14.7	-94.2
2000	345.0	37.8	112.9	44.5	232.1	34.7	-119.2
2001	359.1	4.1	125.2	10.9	233.9	0.8	-108.7
2002	440.7	22.7	155	23.8	258.7	10.6	-130.7
2003	632.3	43.5	201	29.7	431.3	66.7	-230.3
2004	900.7	42.4	278.2	38.4	622.5	44.3	-344.3

자료: 중국 통상부《세관통계》

http://shandong.mofcom.gov.cn/aarticle/sjdixiansw/200512/20051201253896.html

1992년과 2001년에 있어 한국의 대 중국 상위 10대 수출품목을 고찰해 보면 상위 10개 품목이 대 중국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83.2%에서 2001년에는 74.7%로 감소해 9년 사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목들이 어느 정도 다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1992년과는 달리 2001년의 경우, 산업기계와 전자제품의 수입 비중이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종류도 1992년의 750개에서 2001년에는 1,03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중 경제관계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를 잡은 대중 투자의 경우에도 급격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수교 직후인 1993년에 한국은 중국의 10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2002년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는 대 미국 투자규모를 앞질렀고, 이듬해 2003년에는 한국이 중국의 3대 투자국으로까지 부상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중 간 투자관계는 한국이 주도하는 일방향적 특성을 띠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일어난 1998년 이후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그 사업 수와 규모에 있어 모두 크게 성장했다.[58] 2004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 국가이며, 최대

58) 정재호, 앞의 책, pp.234-240.

수출 대상 국가이며,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은 홍콩을 제외하면 중국의 제3의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아래의 < 표 6 > 한국과 중국의 5대 교역국(2004년 기준)으로 교역 관계의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표 6 > 한국과 중국의 5대 교역국

한국의 5대 교역국(2004)

순위	국명	교역액(무역수지)		
			수출	수입
1	중국	793.5(201.9)	497.7	295.8
2	미국	716.2(140.6)	428.4	287.8
3	일본	679.0(-244.0)	217.5	461.5
4	홍콩	214.0(148.6)	181.3	32.7
5	대만	171.6(25.4)	98.5	73.1

중국의 5대 교역국(2004)

순위	국명	교역액(무역수지)		
			수출	수입
1	미국	1,696.3(802.7)	1,249.5	446.8
2	일본	1,678.9(-208.6)	735.1	943.7
3	홍콩	1,126.8(890.8)	1,008.0	118.0
4	한국	900.7(-344.3)	278.2	622.5
5	대만	783.3(512.3)	135.5	647.8

자료: 서진영, 앞의 책, pp.387-388.

이처럼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큼 빠른 속도로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왔지만 한·중 양국 간의 교역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무역역조에 대해 중국이 개선을 요구 하고 있었다. 무역 초기 상당기간 한국은 계속 역조현상을 보였던 것과의 달리 중국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게 되었다. 거

기에서 중국의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59] 2002년 7월 양국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호간의 이익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60]

결국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신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같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 그리고 상호의존 관계를 성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중 관계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물론 한·중 양국관계가 많은 성과를 거듭함과 동시에 역사적 문제, 시장경쟁문제, 해양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제반 요인들이 양국 간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호혜성 등을 통해 양국관계는 21세기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59) 오수열, 김태현, "한중관계 12년의 회고와 발전과제", 『통일한국의 비전과 재외한인 네트워크』,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한국동북아학회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4.11.5, pp.11-12.

60)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2, pp.230-231.

제5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

탈냉전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부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 재조합'의 양상이 나타났고, 동아시아도 국제정치의 구조와 역학이 극히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중국이 한반도 또는 북한에 대해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적 개념은 '순치상의'(唇齒相依) 또는 '순망치한'(唇亡齿寒)으로 대변된다. 즉, 입술(한반도 혹은 북한과 같은 환충지역)이 없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치아(즉, 중국)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호성의 개념은 한국전쟁 이후 중·북 관계를 가리키는 '혈맹'(鮮血凝成的關係)이나 '형제와 같은 관계'(兄弟之邦) 등의 특수한 호칭으로 발전하였다.[61] 그러나 1980년대 당시 중·북 관계는 급속으로 가까워지던 한·중 관계의 진전되면서 서서히 보이지 않는 마찰음을 내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중반 이후 일시 냉각되었던 중·북한관계는 여러 이유를 인해 다시 협력관계로 회복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중국의 대 북한 정치관계 발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및 경제 무역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1절 정치관계의 발전

중국의 대외 행위는 중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경험 등과 밀접한 관련 아래 전개되어 왔다. 중국은 역사적과 이념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북한정권의 안정유지가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됨과 동시에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 세계의 양대 주제”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개혁·개방의 폭을 넓히면서 속도도 가속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이념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이라는 최우선 목표에 추진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북 관계는 새로운 관행을

61) 정재호, 앞의 책, p.16.

조율하며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시기 들어오면서 한·중 관계의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급속한 진전은 중·북한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62]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의 분야로 신속히 확장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군사교류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반면에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질적인 소원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유일한 형제국을 의지하려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정치제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중국과 일치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또한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양국관계는 다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정치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북한과 협조를 하였다.

1995년 10월 장쩌민 주석은 조선노동당 창립 50주년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중·북 양국 간의 우의는 피로써 맺어졌으며 역사의 엄숙한 시련을 겪어왔다. 양국 양당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장기적 방침을 변화 없다"고 중국의 대북 입장을 밝혔다.[63] 또한 1997년 덩샤오핑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은 베이징에 조문을 보내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조의화환을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중·미 관계가 갈등을 겪는 1999년을 고비로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 냉각되었던 중·북한관계는 1999년 6월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수교 이후 7년 동안 끊어졌던 북한과 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재개시켰다. 그 후 < 표 7 >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양국 고위층은 긴밀한 방분으로 관계 발전을 촉진시켰다. 2000년 5월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이 오랜 운둔에서 벗어나

62) 유별준, "中國의 對 南北韓 關係에 대한 考察: 90년대를 중심으로", 2000년, pp.34-37.

63) 『新华社』, 1995年 10月 9日.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김정일과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경제협력, 고위급 인사교류, 지역안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고조 등 4개 합의사항이 채택되었다. 이는 그 동안 냉각되어 오던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1월 재차 중국 상해를 방문한데 이어 동년 9월 장쩌민주석이 북한을 답방함으로써 중·북한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중국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1992년 양상쿤(楊尙昆) 국가 주석의 방문 이후 9년만의 일이며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의 지도자로는 처음이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장쩌민 주석은 당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한 '16자 방침'을 제시하였다.[64]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설정하려 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 당사자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통일을 남북한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표 7 > 중국 · 북한 당국 상호 방문 (1996.6~2003.10)

	방문시간	방문계급	북한→중국	중국→북한
1	1999년6월3일	최고인민회의상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남(金永南)	
2	1999년10월5일	외장		당지아시원(唐家璇)
3	2000년5월29일	조선노동당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비정식)	김정일(金正日)	
4	2001년1월15일	조선노동당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비정식)	김정일(金正日)	
5	2001년3월20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후보위원, 서기처 서기		쩡칭홍(曾慶紅)

64) 『人民日报』, 2001年 9月 4日.

6	2001년7월9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장춘운(姜春云)
7	2001년7월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윤혁(金潤赫)	
8	2001년9월3일	주석		장쩌민
9	2002년5월6일	중앙정치국 위원, 베이징시 서기		지아칭린(賈慶林)
10	2002년10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석(楊亨燮)	
11	2003년4월21일	국방위원회제일부위원장	조명우(趙明祿)	
12	2003년8월18일	중앙서기처서기, 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쉬차이허우(徐才厚)
13	2003년10월29일	중앙정치국상임위원,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우방구워(吳邦國)

자료: 주 북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kp.china-embassy.org/chn/

그러나 다시 복원된 중·북한관계는 냉전시기의 동맹관계 와는 다른 형태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북한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이익이 되는 북한의 존립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수교이후 중·북한관계는 실용주의적 기초 위에 동맹적 색채를 가미시킨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었다.[65]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과 관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려 하였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면서 양국의 정상회담과 상호방문을 통해서 국제사회 무대에서의 협력도 가일층 강화하였다. 특히, 미국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이 과거의 포용정책보다 보수적인 억제정책으로 변화에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과 억지를 대항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북의 관계정상화와 전략적 협력체제는 강화되

65) 黃正一, "韓·中 修交以後 中國의 對北韓 外交政策", 200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었고 양국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성이 작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 및 사회교류는 활발히 진행되는 실용주의적 관계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이 시기에 중국의 대북 정치·외교 전략 및 정책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평화상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략이 추진 되어왔다.

제2절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완충지대로 여기 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안보 전략적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는 북한을 우선시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의 경제난국이 계속되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이 만연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의 인접국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의 길로 접어든다면 이는 중국에게 참기 어려운 안보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그리고 지리 전략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전략적 보호막을 유지하거나 만주지역으로 북한의 난민이 대량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구하려고 개입할 여지가 있다.[66]

그러나 중국은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제2대 지도부 등장 이후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국가이익을 견실하게 추구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 일변도의 정책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표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은 한반도 지역에서의 평화적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에 대한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의 확보, 그리고 한·중 경제교류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부합되는 실리적인 차원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했는데도 불

66)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도서출판골드, 2004, p334. Samuel S. Kim, "The Future of China and Sino-ROK Relation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2-23, 1997, p.24.

구하고[67]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자본주의 세력 간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냉전 종식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국제경제체제와의 연결을 국력 신장의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정부의 대북한 입장도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과에 대해서는 자국의 근본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방지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국가목표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지대한 파급영향을 미치고 만일 북한이 붕괴하고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게 되면 중국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 지리적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체제유지를 적극 지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퍼부었으며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해 왔다.

중·북 관계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를 수립한 시기를 일시 냉각상태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만한 상호 선린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 외교정책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는 중국의 안보상 중요한 전략지대이라서 중국은 21세기에 동북아지역정세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1993년 이래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사로 부각되었을 때, 중국은 무력 수단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와의 접촉시에도 남북 관계개선을 설득해 왔다. 1999년 6월 장쩌민 주석은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기조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68]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회담 방식으로 남북한 분쟁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 및 긴장완화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진행되어온 차관급회담 및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모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

67) 신동호, "중국 위협론의 실체와 한·중 관계의 전망", 2003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1.

68) 『人民日報』, 1999年 6月 5日.

정부의 의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지원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69]

한·중 수교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하나의 한국"정책에서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중 관계의 증진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989년 이후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소멸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맞이하였고, 미·일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고립은 북한 경제난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에도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양국 맺은 상호원조조약 등 이미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재개했다. 또한 1996년5월 양국은 『경제기술협정』(經濟技術協定)을 체결했고 이 협정에서 상품차관과 경제·군사에 대한 무상 원조 등의 내용을 포함되었다. 1997년 4월에 북한주재 우안용샹(萬永祥)중국대사가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을 만나 식량 7만톤 지원을 밝히면서 "중국은 최근 식량을 포함한 각종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음"을 미루어 식량 외에도 다양한 대북 경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70]

또 한편은 양국은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협력이 증가되었다. 1999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50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과 15만톤의 식량과 40만톤의 코크스를 무상지원을 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 방문은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정치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양국관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김정일은 17년만에 장쩌민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에 새로운 식량과 물자 지원을 제공하였다. 2001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장쩌민 주석은 11년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2003년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는 약속을 하고, 양국 정상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정치사상체제와 대외정책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그 후 양국관계 발전에서의 정치적인 장애물을 일소하였다. 그 후 양국간의 고위층 왕래를 계속 유지하고 중대한 국제와 지역문제에서 협상과 협정을 강화하며 경제무

69) 오수열, 앞의 책, p.188.

70)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서울: 중심, 2001, p.280. 재인용.

역 협력관계 및 인적 교류를 강화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면서 양국 지도층의 방문을 통해 중·북 관계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2000년 5월 양국정상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지역안정 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라는 사항, 특히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과 안정적인 국제질서 형성의 필요성을 재학인하여 양국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71]

제3절 경제·무역관계의 발전

중국은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대북한 정책기조를 보여주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경제는 1990년에 3.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규모가 1989년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거의 파탄상태에 직면했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 가장 밀접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고, 북한이 이러한 곤경에 처한 때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후원국가로 남아있다.[72] 한·중 수교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기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대응할 수는 없었다. 이미 소련의 소멸과 합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어,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북한은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심화되는 경제난에 봉착하여 중국의 경제적 지원 역시 북한으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중 수교와 한·중 간의 경제적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동북아 역학구조와 역사적 관행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전통적인 정치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의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고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의 일시적인 냉각관계는 1990년

71) 리단, "강택민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2002, p.189.

72) 오수열, 앞의 책, p.161.

대 중반부터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있어 중·북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의 발전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었다.

첫째, 중국의 대 북한 경제 협력은 북한의 요구와 의지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은 2000년에 북한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북한이 대외전략을 수정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북한은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폭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0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거행하였다. 그 이후 오래지 않아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에 중·북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시키는데도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중국의 대북한 무상지원. 중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양국 교역관계에서 북한에게 요구했던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우호가격제도와 물물교환(구상무역)을 부활시켰으며, 경제원조도 다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북 관계는 실용주의와 동맹관계가 뒤섞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재조정되어 나갔다.[7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 후반에 들어서 북한은 수재로부터 시작한 자연재해 그리고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폐단으로 계속된 식량난을 비롯하여 에너지난으로 말미암은 공장 가동률의 저하, 그리고 비롯된 생필품의 부적 등으로 이른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접국이며 몇 남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경제난국으로 인해 파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 표 8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북한 식량 및 에너지 분야의 무상지원 및 교역강화 전략을 재개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국의 북한지원 강화는 미·중관계가 악화될수록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미국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오폭으로 미중관계가 경색된 후 중국-북한관계가 강화되었으며 김정일의 2001년 1월 중국 방문과 장쩌민의 북한 방문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73) 유별준, 앞에 논문, pp.27-28.

< 표 8 >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1998~2001년)

	1998	1999	2000	2001
품 명	식량 10만톤 원유 8만톤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	식량 4만톤	식량 20만톤 디젤유 3만톤
액 수	3,204.7만불	4,836.4만불	2,756.4만불	6,912.9만불

자료: 중국해관전산통계 (1998~2001), 金衡坤, "金正日 證券登場以後 北韓-中國關係研究", 2003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0.

이러한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무엇보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불안정의 야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국경탈출 가능성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지자 1996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수준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중국은 지난날과 같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우호협력관계가 강조되던 때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도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냉정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개방을 권유하는 이유는 중국은 북한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경제난이 가중되어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차로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이었다. 비록 북한은 개혁·개방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으며, 북한당국 또한 경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 선전(深圳)을 비롯한 경제특구지역과 상하이의 푸동(浦东)지역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김정일은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에 본격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국 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란 추측도 얻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룽지 총리는 상하이에서 김정일을 맞이하게 하고, 일부 산업시설을 그가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김정일은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주룽지 총리 주최로 열린 연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김정일이 공식적인 정권 등장 이래에 없었던 것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

다.[74] 이러한 북한은 동유럽과 소련의 운명을 피하면서 중국의 경험을 모방하여 생존과 적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0년에 다수의 서유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 체제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넷째, 중·북 무역협력은 대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접국이며 몇 남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경제난국으로 인해 파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 표 9 > 중·북한 교역통계 (1991~2004년)

(단위: 억불, %)

연도	수출	수입	총액	성장율%
1991	5.25	0.86	6.11	—
1992	5.41	1.55	6.96	13.9
1993	6.02	2.97	8.99	29.1
1994	4.24	1,99	6.23	-16.4
1995	4.86	0.63	5.49	-11.9
1996	4.97	0.69	5.66	3.1
1997	5.35	1.22	6.57	16.1
1998	3.56	0.57	4.13	-37.2
1999	3.28	0.42	3.70	-10.4
2000	4.51	0.37	4.88	31.9
2001	5.73	1.67	7.40	51.6
2002	4.68	2.71	7.39	-0.2
2003	6.28	3.95	10.23	38.5
2004	7.99	5.86	13.85	35.4

자료: 『중국 해관 통계연감』(1991~2004)

중·북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북 상호직접투자 또한 소폭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 보증의 외국기업 투자에서 "우선 상환, 현물결제, 통일결산"의 3대 신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2년 7.1조치

74) 『연합뉴스』, 2001년 1월 22일.

이후,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북한경제정책이 더욱 많은 비즈니스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중·북 변경을 매개로 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75]

이로 말미암아 중국은 김일성 생존 시에는 물론이고, 그의 사후에도 때때로 대규모 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을 격려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고수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동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체제붕괴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결코 중국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당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향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이 체제를 고수하면서 완만한 경제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여파가 중국에 밀려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76]

75) 张慧智, "中韩对朝经济合作探析", 『吉林大学东北亚研究中心』, 2008年第3期, p.92.

76) 오수열, 앞의 책, pp.170-172.

제6장 결론

본 논문은 문헌 중심의 연구방식을 취하며 탈냉전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목적으로 삼고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냉전 후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로운 것이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다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시기 개혁·개방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기본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중국의 지도부는 장쩌민 시기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외교정책을 펼쳐나간 것이었다. 중국은 4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외정책이 자본과 기술도입하면서 대서방접근과 평화적인 주변 환경의 구성으로서 대 한반도 정책도 북한의 무력사용을 견제하면서 평화공존 정착에 순기능적 역할로 작용될 수 있었다.[77] 더구나 한반도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주변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더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중국 정부가 동북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변화를 대책하기 위해 동북공정이란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또한 동시에 경제발전 빈부격차 인해 나타난 민족종교의 분열활동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78] 지역발전 전략이 단계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시기에 미국의 패권국 지위 유지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이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강화와 군사력 확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중국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일본과의 삼각구도관계 속에서 자국의 안보전략 기조

77) 김익수, "중국의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한·중 경제협력의 신 전개", 『지역경제』 1993년 1월, pp.34-53.

78) 중국 서부에는 간쑤 성, 구이저우 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성, 섬서성, 쓰촨 성, 시짱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및 충칭시의 10성구시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전국 3분의 2의 국토 면적과 22.8%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이나 수력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개척을 기다리는 토지 자원,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가지는 관광 자원이 존재한다. 최근 국무원은 중국 서부 대개발의 범위에 10성구시에 내몽고 자치구와 광시 좡족 자치구도 추가해, 12성(구,시)로 설정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서부대개발

인 평화공존 5원칙과 반 패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세력 개편이 중·미·일 중심의 삼각체제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고 여기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과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세력구도 형성을 저지하고, 중국의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확보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내적 동북공정 추진 및 경제 지속 발전 요인과 미국 및 일본의 세력 확장의 우려하는 국제환경이 서로 작용하여 중국은 한반도에서 경제적·정치적 등 이익을 추구해 왔으며 대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일반적인 대외정책노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남한의 대북한 햇볕정책과 자주평화통일지지이다.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1989년에 중국의 정치무대에 등장한 후 한반도에서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공식 표출되는 입장이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필요성이었다. 예를 들어 1999년 9월 11일의 APEC 제7차 회의에서 장쩌민 주석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고 불리한 일은 안하기를 바란다고" 주장을 밝혔다.[79]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의 결과로 제1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고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만들었고 이 공동선언을 인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보였고, 한반도 평화적·자주적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남북한의 교류증진 및 대화를 지지했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하였다. 남북한 그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삼키는 것에 대한 반대해왔다. 남북한이 6월 중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한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을

79) 『人民日報』, 1999年 9月 12日.

하기로 한데에 대해 중국은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정상회담이 적극적인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기에 남북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에 진정으로 오래가는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야 중국은 비로소 한반도에서 수시로 출현할 긴장국면이 중국에 미치게 되는 전략적 견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더 많은 힘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중국의 국가통일의 목표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한반도 안정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한 국민의 근본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80]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중국의 경제에 유리하고 아시아·태평양 구조의 다극화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 후의 한반도는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을 촉진할 것이며, 또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도 촉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2015년에는 일본 GNP(국민 총생산)의 2배를 넘어 세계 2위,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남한과의 협력적 동반자관계－군사교류의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 1998년 11월 방중으로 한·중 양국이'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외에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계속해서 2000년 주룽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선언들과 함께 양국 간 교류를 확장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양국 간의 군사교류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역사상에서도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1999년 8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국방부 장관 치이하오톈(遲浩田)의 초청으로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안보 논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중 첫 합동참모본부 부장급회의가 2001년 9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한반도를 포함함 동북아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군사교류 협력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조성태 한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2001년 1월 19-23일 중국 군대의 최고 지도자인 치이하오톈은 한국

80) 金昭中,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中國學論業』, pp.264-265.

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7-18일 한국과 중국의 국교를 수립한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한·중 안보대화가 열렸다. 이는 그 동안 경제교류에 집중됐던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초보적인 군사교류를 넘어 진일보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관계로 도약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지지이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논의가 전개되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한국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취하면서 한·중 간에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정책조율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공조가 이루어진다. 가령, 중국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국제적 지지자로 등장했다. 아울러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실질적으로 공조해 왔다.[81]

이러한 인식은 2002년 말 다시 제기된 북한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내세웠던 "당사자 간 해결"이라는 원칙을 버리고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완전한 참여자로 등장했고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에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무력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이나 제재는 북한의 입장을 약화시켜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북 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안보 구도의 변화도 중국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통일이 실현되

81) 金才澈, "중국의 '등장', 균형정책, 그리고 한반도", 『中蘇研究』, 통권 100호(2003/2004), p.31.

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주변 환경 안정과 국익이라는 차원을 전제로 한 입장인 것이었다.

결국은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매우 복잡한 양상 속에서 전개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역내 강대국과의 기존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재개하고 지속발전 시켜나가는 한편, 한국과도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문제들도 포함하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이와 같이 중국 제3대 지도부는 경제발전이라는 국내정치의 요구에 따라서 '구동존이(求同存异)' 의 원칙으로 주변외교를 실시하여 평화적인 발전환경을 추구하고 있었다.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불통불란'(不統不亂), 즉 한반도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이 출현하거나 통일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는 것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 이른바 남북한 평화상태 유지와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립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82]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기 남북한 협력과 화해의 정세를 나타났을 때 중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중국은 "남북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다 "는 주장을 표명하였다.[83]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남북한 대해 등거리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상호교류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추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강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었다.

82) 黃正一, 앞의 논문, pp.38-39.

83) 『人民日報』, "江澤民同金正日舉行會談", http://www.997788.com/pr/detail_115_14759255.html, 2000年 6月 2日.

참고문헌

1. 국문

1) 단행본

김경호, 『국제정치 환경과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2001.

김성철, 『일본외교와 동북아』, 한울아카데미, 2007.

김익수, “중국의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한·중 경제협력의 신 전개”, 『지역경제』 1993년 1월.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2001.

박영준, 『제3의 일본: 21세기 일본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한울아카데미, 2008.

方秀玉, 『中國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인간사랑, 2004.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1999.

서진영, 『중국의 대외관계: 둥북아 신질서와 중국』,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 구소, 2000.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폴리테이아, 2008.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도서출판골드, 2004.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한연합을 중심으로』, 한울, 2000.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2.

외교통상부, 『2000년도 외교백서』, 서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01.

이태환, 『중 · 미관계의 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1999.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정진위외 지음,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정형근, 『21세기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주)엔북, 2007.

하상식,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도서출판 해남, 2012.

NEAR재단 엮음,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연미화중으로 푼다』, 매일경제신문사, 2011.

2) 논문

金光浩, "6 · 15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才澈, "중국의 '등장', 균형정책, 그리고 한반도", 『中蘇研究』, 통권 100호(2003/2004).

김수현,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2007년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琴喜淵,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외교정책," 『중소연구』, 제27권 제4호, 2005.

Liu, Dong Jian ·김홍수, [번역문]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와 한중관계의 추세---평화공존에서 조화세계로", 『한국민족문화』, Vol.37 No. 2010.

리 단, "강택민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2002.

박병광, "한중관계 15년의 평가와 과제", 『국방정책연구』, 2007년 가을호.

박정현, "남북협상의 정치사회적 요인 연구: 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의 사례분석", 2010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동호, "중국 위협론의 실체와 한 · 중 관계의 전망", 2003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상진,"15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정책목표, 추진 환경, 수행능력", 『현대중국연구』 1집.

이태환, "9·11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신아세아』, 제11권 제2호, 2004.

吳泰燮, "金大中 政府의 對北 政策과 南北頂上會談", 2003년 全州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오용석, "중국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중국연구』, 제19권, 2000.

이 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특징", 2011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수열, 김태현, "한중관계 12년의 회고와 발전과제",『통일한국의 비전과 재

외한인 네트워크』,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한국동북아학회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4년11월5일.
이승익, "당대 중국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유형 연구", 2010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 第12輯, 2004.
李桂蘭,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2007년 박사학위논문.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2008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평화연구』 Vol.17-2 October 2009.
윤휘탁, "중국의 변강 연구동향과 변강인식: 동북변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 연구재단, 2004.
이홍환,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연구", 2004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 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장쩌민·후진타오를 중심으로", 2010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천구, "중국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통일문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한 함, "한중수교의 배경과 과정: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노선을 중심으로", 2010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지환,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햇볕 대 제재의 이분 법을넘어서", 『공공정책연구』, 통권 제17권 2호, 2010.
黃正一, "韩 · 中 修交以後 中國의 對北韓 外交政策", 200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중문

1)단행본

『鄧小平文選』, "目前的形勢和任務", 北京：人民出版社, 1983.
李敦球,『战后朝韩关系与东北亚格局』, 新华出版社, 2007.

楊公素,『中華人民共和國外交理論與實踐』, 北京: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1997.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2)논문

曹中屏, "朝鲜半岛同一问题与周边大国", 『韩国研究论丛』第九辑, 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 2002.
車城滿, "中共實用主義外交政策與中韓應之研究", 私立中國文化大學三民主義研究所, 1991.
程玉洁, 戚保良, "朝鲜半岛新变化极其发展趋向", 『现代国际关系』, 2000年 第2期.
鄧小玲, "從"一邊倒"到"新型伙伴關係"三代領導核心的國際戰略思想",『學術論壇』, 2005年 第9期.
韓震涉, "發展中韓伙伴關係迎接21世紀的挑戰", 『中國外交』, 2000年 第5期.
何彤梅, "中韩政治外交关系研究：1945-2007", 2008年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金正昆, "伙伴戰略:中國外交的理性抉擇", 『教學與研究』, 2000年 第7期.
金 哲, "中朝经贸合作现状分析". 『北韩经济动向』, 2008年 第5期.
李 丹, "论江泽民的国际战略思想", 『南阳师范学院学报』, 2004年1月26日, 第1期.
刘金质,"全面发展的中韩合作伙伴关系：为中韩建交十周年而作国际政治研究", 『中國外交』 2002年第3期.
刘雪莲, "中国在韩半岛的地缘安全战略分析", 『东北亚论坛』, 2007年 第5期.
寧 騷, "選擇伙伴戰略 營造伙伴關係-跨入21世紀的中國外交",『新視野』, 2000年 第2期.
王巧榮, "論20世紀90年代中國的夥伴關係外交",『思想理論教育導刊』, 2006年 第2期.
王光厚, "试论改革开放以来的中国周边外交",『国际论坛』, 2008年11月 第十卷 第六期.
王 生, "中韓建交20年：取得的成果與面臨的課題", 『東北亞論壇』, 優先出版, 2012年 8月 20日.

閻學通, "中國外交需立足周邊", 『瞭望』, 2000年 第11期.
张慧智,"中韩对朝经济合作探析",『吉林大学东北亚研究中心』,2008年第3期,p.92.
郑 慧, "评析韩国政府的'阳光政策'", 2011年 辽宁大学硕士论文.

3. 영문

논문

Chae, Kyung-Suk,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sessment and Outlook",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32.2004.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Park Haksoon, "Bush Administration's New Approach to North Korea", *Korea Focus,* 2001May-June Vol.9, No.3.

Samual S. Kim, "The Future of China and Sino-ROK Relations," The Future of China Northeast Asia, Seoul: The Institur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1998.

Thomas J. Christensen,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4 Spring 1999.

4. 신문, 인터넷사이트

『한국일보』, 1993년 3월 5일.
『조선일보』, 1995년 11월 14일.
『연합뉴스』, 2001년 1월 22일.
『연합뉴스』, 2001년 8월 24일.
『人民日報』, 1991年 11月 16日.

『新 华 社』, 1995年 10月 9日.
『人民日報』, 1995年 11月 14日.
『人民日報』, 1997年 9月 21日, 江澤民, "高擧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在中國共産黨第一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8年11月27日, "中日發表關於建立致力於和平與發展的友好合作伙伴關係的聯合宣言".
『人民日報』, 1999年 6月 5日.
『人民日報』, 1999年 9月 12日.
『人民日報』, “江澤民同金正日擧行會談”, 2000年 6月 2日, http://www.997788.com/pr/detail_115_14759255.html.
『人民日報』, 陳向陽, "冷靜與全面審視中日關係 切忌因小失大", 2005年 4月 22日.
『新 华 网』, 2007年10月25日.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pkukorea.tistory.com/125
http://www.unikorea.go.kr
http://shandong.mofcom.gov.cn/aarticle/sjdixiansw/200512/20051201253896.html
http://ko.wikipedia.org/wiki/서부대개발